

# ‘눈덩이’ 적자 더 이상 못 메운다

## ■광주시 민자도로 협약파기 추진

### 협약 변경 6개월 협상 결렬 ‘공익 처분’ 법적 절차 나서

광주시가 적자보전책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한 관리운영권 회수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을 회수는 전국 최후다.

광주시는 30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과 3구간(효덕IC~포암지구)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주)와 지난 6개월 동안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렬됐다”면서 “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시행권 취소 등 관리운영권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자 유치로 추진된 이들 도로는 건설 당시 민간사업자와 적정 수익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광주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계약돼 있다.

제1구간은 28년간 당초 예상 수입액의 85%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3구간은 30년간 90% 이하일 때 부족분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민자구간은 잘못된 교통량 산출로 매년 약 160억원의 시비가 보전되면서 재정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민자도로 적자보전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점을 고려, 민자사업의 경우 수입보장률과 보장기간을 75%, 10년으로 규정해 고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97년(1구간), 2001년(3구간) 체결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은 계약의 기본조건인 통행추정량이 크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와 금융 환경 등이 크게 달라진 만큼 재협상을 통해 수입 보장률을 10% 이상 낮출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초 수입보장률과 보장기간(1구간 85%·28%, 3구간 90%·30년)을 정부 고시 수준인 75% 10년으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맥쿼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14개소 타 민자

사업도로에 끼칠 영향과 참여주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어 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4월 3일 수입보장 조건을 천안~논산고속도로 수준인 80% 20년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4월 26일에는 협약변경이 어렵다면 관리운영권을 시에 매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들은 최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왔다.

시는 맥쿼리측과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재협상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키로 결정한 데 이어 광주시에 관련예산 144억원을 삭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이 도로 운영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주)의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와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공익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민간투자비가 2천억원 이하로 지자체에 심

의권이 있는 3구간에 대해 공익처분에 들어간 뒤 그 결과에 따라 1구간에도 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익을 위한 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공익처분이 결정되기까지는 3개월 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이익에 필요할 경우 지정 취소 등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시가 공익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해 민자구간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5일 개통한 제4구간(서창IC~신가IC)은 협약시(2003년) 수입보장률 80%·보장기간 15년으로 수입보장 조건이 천안~논산 고속도로 수준(수입보장률 80%·보장기간 20년) 이하로 적절해 관리운영권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건설 때 민자유치를 하면서 통행 차량 추정치 등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자유치구간 중 하나인 제2순환도로 송암요금소 주변이 한적할 정도로 통과 차량이 적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국무조정실·건교부 ‘서남권 발전구상 토론회’ 내용

국토 균형발전과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서남권 개발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서남권은 비교우위지역이 풍부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무조정실과 건교부가 31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여는 ‘서남권 발전구상과 특별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추진 전략과 서남권특별법의 방향을 간추린다.

### “국토 서남부권 新삼각 발전축 해양관광·물류거점 개발해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서남권 발전구상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는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남권 개발을 통해 국토 서남부의 신삼각 발전축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현재 개발 중인 광주권과 광양권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 연계하고, 외연을 넓혀 수도권과 새만금·제주국자유도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토 서남부의 삼각 발전축을 완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입주기업 세금 감면 등 투자 촉진 특별법 시급

또 서해안과 남해안의 교차점에 위치한 서남권 개발로 국토의 서·남해안 축을 조기에 완성함으로써 개방형 국토 개발축을 형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남권은 인접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한미 FTA 체결 등 급변하는 변화에 대비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남권을 개발해 지난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에 대응하는 거점을 만들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과 일본 상품의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월출(민주·서구 4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앞으로 10년 단위로 주택종합계획과 함께 매년 다음해 주택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주요 주택정책의

생애내지 보급기지 ▲조선산업 클러스터 ▲친환경 농수산업 등 특화산업 ▲서남해안 물류거점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남권은 자족적 중핵도시권을 형성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끌고 환경해 경제권시대 경쟁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도움될 내용 담아야=임경수 성결대 교수(도시지역과학부)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종합발전 체계를 갖춰 낙후지역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제도가 단편적이고, 특히 인센티브가 미흡해 민자유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제정될 관련 특별법은 낙후지역 및 인접지역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갖춰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에는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관란사항과 기반시설 설치,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각종 자금지원 및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주택공급 특례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광주시, 의회 심의 안 거친 예산 집행 ‘물의’ “지자체 재정력 감안 복지예산 차등 지원율”

### “의회 무시한 처사” 반발

광주시가 시의회의 예산 심의도 받기도 전에 예산 집행 절차에 들어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산구 옥동 지하철 차량기지 급수시설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29일 D건설과 공사계약(2천376만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추정예산 심의는 30일 예정된 것이어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기도 전에 집행 과정을 시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앞서 환경녹지국도 지난 29일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기도 전에 환경단체 보조금 1천만원을 미리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급수시설공사 등의 경우 시급한 사업이어서 임찰을 한 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고, 환경단체 보조금의 경우 다른 예산 항목에서 지출한 뒤 다음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가 30일 국비 복지예산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 차등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보냈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종철)는 이날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황정호)가 제출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1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수요는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을 감안해 국비를 지원토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조) 규정에 맞게 차등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차등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복지교부세 신설 ▲차등 지원에 관한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시 주택조례안’ 시의회 산업건설위 통과

앞으로 광주시의 주택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주택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의 통과를 다음 달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월출(민주·서구 4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앞으로 10년 단위로 주택종합계획과 함께 매년 다음해 주택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주요 주택정책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하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인구 증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오히려 도시 자원을 낭비했다”며 “광주시가 이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스타·세기보청기**



세계적 권위 인증  
**품질 보증!**



#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세계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대리점 사업본부 02)538-9388

무료상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방문해 주십시오.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